

광주시·도시공사 대형 개발 사업지도 투기 의혹

2000년대 총 11개 대형 사업 추진...사업비만 2조 5000억원 넘어
최근 5년 새 공공주택 5곳 2400세대...관련 공무원 전수 조사해야
광주역·송정역 일대 개발 호재 발표 앞두고 땅값 들쭉이기도

광주시가 3기 신도시 중 하나인 광산구 산정지구 내 공직자 투기 의혹을 조사 중인 가운데 조사 범위를 광주 공공개발 사업 전반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광주시와 시 산하 도시공사 등이 자체적으로 각종 주택사업과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인근 땅값이 치솟는 현상이 반복됐기 때문이다. 일부 지역에선 대형 개발 호재에 앞서 자치단체 공직자들이 직접 또는 지인을 앞세워 토지나 상가건물을 매입하는 등 투기성 투자에 나섰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고질적 병폐 중 하나인 땅 투기를 뿌리뽑기 위해선 수상한 토지 거래 행위를 찾

아낸 뒤 계좌추적 등 자금 흐름을 파악하면 업무 관련 공무원의 가담 여부 등을 모두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번 기회에 사전정보 등을 약용한 땅 투기 행위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7일 광주시와 광주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2000년대 들어 광주도시공사(광주시) 주도로 진행된 대형 도시개발사업은 남구 예너지밸리 일만산단, 도시첨단산업단지, 빛고를 건강타운 조성(2단계), 상무지구 빛고을고객센터 등 총 11개에 이른다. 이 가운데 도시공사 홈페이지에 공개된 8개 사업비(3개 사업은 사업비 비공개)만 합산해도 2조 5000억원에 육박한다.

광주시와 도시공사는 또 최근 5년 사이 북구 임동 서림마을 행복주택(500세대)과 광주역 행복주택(700세대) 등 공공형 공동주택 5곳을 건립했으며, 총 세대수만 2400세대에 이른다. 앞서 2000년~2015년 사이에도 공공주택 7곳 3756세대를 건립했으며, 1990년대에는 5곳 7673세대 등을 신축해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 같은 각종 도시개발 사업이 추진될 때마다 시청 안팎에선 사전 투기설이 끊임 없이 제기돼 왔다. 그 내용도 구체적이다. 광주시의 한 공무원은 "확인되지 않는 내용이지만, 일부 관련자들이 감사 등에서 적발될 우려가 있는 본인이나 가족, 친인척을 대신해 믿을 만한 지인을 통해 투자하거나, 개발 정보만 알려주고 사례를 받았다는 말이 떠돌기도 했다"고 말했다. 자치단체 주도의 직접 토지 개발 행위 뿐 아니라 대형 SOC 등 인프라 구축과 관련한 사전 정보를 입수한 일부 공무원의 투기 의혹을 제기하는 목소

리도 나온다. 실제 최근 개발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광주역과 송정역 주변도 2013~2016년 사이 개발 계획 발표를 전후해 일시적인 땅값 상승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KTX 송정역 이전으로 슬럼화를 겪어온 광주역 인근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 2016년 초반까지 평당 평균 110만~160만원 수준을 유지하다, 2016년 후반기 들어 일시적으로 최대 217만원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 수개월 뒤 광주역 부지에 북부경찰서와 북구청, 시교육청 등 노후한 공공기관이 이전될 것이라는 말이 나왔고, 실제 관련 정책 토론회 등도 이어졌다.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그 무렵 갑자기 상가건물 매입 등을 상담하는 사람이 늘었다"면서 "일부는 인근 자치단체 공무원인 것으로 추정되며, 실제 구입으로도 이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2면으로 계속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한명숙 사건 수사지휘 "임은정 의견 들어라"

박범계 "대검 부장회의서 재심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7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 부장회의를 열어 기소 가능성에 재심의하라고 수사지휘했다. 박 장관은 대검이 사건 관련자들을 무혐의 처분하는 과정에 비합리적 의사 결정이 있었다며 이같이 수사지휘를 했다고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임에도 그동안 사건 조사를 담당해 온 한동수 검찰부장과 임은정 대검찰청장 연구관이 최종 판단에서 배제됐다며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이번이 역대 네 번째다. 박 장관은 우선 대검찰청의 모든 부장이 참여하는 '대검 부장회의'를 열어 한 전 총리 재판에서 허위증언을 했다고 지목된 재소자 김모씨의 혐의와 기소 가능성을 심의하라고 조남관 총장 직무대행에게 지휘했다. 아울러 한동수 검찰부장과 허정수 검찰3과장, 임은정 검찰정책연구관으로부터 사안 설명을 듣고 충분히 토론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박 장관은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김씨의 2011년 3월 23일자 법정 증언 내용의 허위성과 위증 혐의 여부 등을 논의하라고 주문했다. 이를 토대로 김씨가 그 이전에 한 법정 증언 내용까지 함께 포괄적으로 볼 수 있는지도 따져보라고 했다. 박 장관은 이 같은 회의 결과를 토대로 오는 22일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김씨에 대한 입건과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고 주문했다. 박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가 급랭하면서 또다시 갈등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은 작년 4월 한 재소자의 폭로에서 불거졌다. 그는 당시 수사팀이 금품 공여자인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설 대표의 구치소 동료 재소자들을 사주해 한 전 총리에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압박했다는 진정을 법무부에 냈다. 진정 사건을 넘겨받은 대검은 "한 전 총리의 재판과 관련해 증인 2명과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사건은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연합뉴스

"내가 봤다" 5·18 계엄군 첫 사죄 ... 유족 "늦었지만 고맙다" 용서

5.18 묘지에서 유가족 만나

1980년 5월 23일 민간인을 향해 총을 발사해 숨지거나 계엄군에 40여 년만에 처음으로 유가족에게 무릎을 꿇었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으로 참여했던 공수부대원이 자신의 사적으로 인해 사망한 유족을 직접 만나 사죄와 용서를 구한 것이다. 계엄군의 이번 사죄는 당시 7공수부대의 활동에 대한 조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진상조사위의 추가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17일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따르면 5·18민주화운동 당시 7공수여단 33대대 8지역대 소속의 A(73)씨가 지난 16일 오후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희생자의 유가족을 만났다. A씨는 국립 5·18민주묘지 민주의 문 접견실에서 자신의 총격으로 희생당한 고(故) 박병현씨의 친형 등 유가족을 만나 참회의 눈물을 흘렸다. A씨는 "어떤 말로도 씻을 수 없는 아픔을 드러 죄송하다. 사과가 또 다른 아픔을 줄 것 같아 망설였다"면서 "40여 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렸다. 이제라도 유가족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어 다행이다"라고 유가족에게 무릎을 꿇고 사죄를 했다. 이에 박씨의 형인 박중수(73)씨는 "늦은 사과라도 고맙다"며 "과거의 아픔을 다 잊어버리고 떳떳하게 마음 편히 살아달라"고 A씨의 사과를 받아들여 용서의 뜻으로 포용했다. 당시 희생당한 박씨는 1980년 5월 23일 농사일을 도우러 고향인 보성으로 가고자 광주 남구 노대동 노대남제 저수지 부근을 지나던 중 순찰 중이던 A씨 일행에 사살된 것으로 추정된다. 1980년 당시 7공수·11공수 부대원들은 5월 21일 오후 4시께 전남도청 집단 발표 이후 외곽으로 철수한 뒤 화순으로 가는 길목인 주남마을 등에 주둔하며 차량 통행을 봉쇄한 상황이었다. 광주를



16일 오후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참여했던 공수부대원(왼쪽)이 자신의 총격으로 사망한 고(故) 박병현 씨 유가족에게 사죄하고 있다. 가해자가 특정인을 숨지게 했다고 고백하며 유족에게 사과 의사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제공>

고립시키기 위한 것이다. A씨는 총격 당시 상황에 대해 "1개 중대 병력이 광주시 외곽 차단의 목적으로 경찰 등의 임무를 수행하던 중이었다"며 "화순 방향으로 걸어가던 젊은 남자 2명이 공수부대원을 보고 도망을 했다. 정지를 요구했으나 겁에 질린 채 달아나길래 무의식

적으로 사격을 했다"고 진술했다. 또 "숨진 박씨의 사망 현장 주변에선 총기 등 위협이 될 만한 물건이 전혀 없었다"며 "대원들에게 저항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단순히 겁을 먹고 도망가던 상황이었다"고 회상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01년 '대통령직속 의문사진상

규명조사위원회'에서 나온 "비무장 민간인들에게 총격을 가한 뒤 한명을 암매장했다"는 증언을 추가로 조사하던 중 드러났다는 점에서 당시 작전에 동원된 계엄군들의 사죄와 더불어 고백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재건축·재개발 사업 잇단 소송에 '시골' >6면
- KIA, 신인 1차 지명 '행복한 고민' >18면
-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 김정운 소장 >20면

사랑스러운 감사의 67년
민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1]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NEW

2weeks
고민 고민 해결이 눈가 및
눈가 주름 개선에 효과적입니다

IOPE LAB

슈퍼레티놀

단 2주 만에 주름잡다

| 아이오페 레티놀 엑스퍼트 0.1% |

주름을 위한 당신의 노력을, 얼마나 효과가 있었나요?
이제, 주름보다 강한 슈퍼레티놀로
확실한 주름 개선 효과를 느껴보세요

레티놀은 아이오페

IOPE

*인·40~50세 연령 여성 대상 2019.03.16~10.17 4주간 임상시험 결과
고객상담실 080-023-5454 | www.iope.com